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역사가 바로 서는 새해

미국의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였고,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그 다음 6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이 8위로 내려가고 8위였던 한국이 6위로 올라선 것이었다. 분단 국가 한국이 인구 3억 5천만 명을 가진 일본보다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 계열의 일본경제연구소는 '아시아 경제 중기 예측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더 이상 일본을 우러러보는 국민들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역사를 변조했다. 전북 남원이 야마토왜의 식민지인 '기문국'이고, 경남 합천 역시 임나일본부의 하나인 '다라국'이라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의 이런 논리를 문화재청이 그대로 채용해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가 큰 반발이 일면서 현재는 잠정적인 중단 상태다. 만약 남원이 기문국, 합천이 다라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일본 초중고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될 것이다. 인술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서기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식민지로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신청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 현장입니다."

4세기에 일본 열도에는 통일된 나라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군사력은 강해서 해외에 식민지를 운영했는데, 그 지역들이 경상도 및 전라·충청도라는 것이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 역사학계의 논리다. 문제는 정치권과 관계(官界)다. 자국 역사를 팔아먹는 이런 반민족 매사(賣民)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나라,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 매국 역사학자들은 절대 포기를 모른다.

최근에는 '전라도 1천 년사'를 쓰면서 다시 남원을 기문, 전북 장수를 반파, 그리고 섬진강 유역을 야마토왜의 식민지인 임나 4현으로 표기했다. 한마디로 전라

도는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였다는 것인데 도비 24억이 들어갔다. 역사가 정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이 역시 도민들의 항의로 일단 출간은 연기되었다. 웃기는 것은 이를 쓴 역사학자들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편찬자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은 '노산군일기', 즉 '단종실록' 뿐이었다. 어린 군주를 죽인 사실이 두려워 이름도 쓰지 못했다.

국립 세검도 '전라도 1천 년사'를 써 놓고 무엇이 두려워 집필자 이름도 못 밝히나? 고대 야마토왜는 가야계가 류슈(九州)에 세웠다가 오사가 근처 나라(奈良)로 천도한 후에는 백제계가 지배했던 제후국이다. 일본 군국 세력들과 한국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야마토왜가 가야와 백제를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매국(賣國) 매사(賣民)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나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대학 강단과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새해에는 이런 반역사·반민족적 상황이 종식되고, 역사학도 제자리를 잡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5·18, 교육과정서 삭제 "헌법 수록" 빈말이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입으로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5·18 지우기에 나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고시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초중고교 사회과 교육 과정에 이전 교육과정에는 명시됐던 5·18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제외돼 있다. 이는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진다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항목을 없애면서 개별 사건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5·18 삭제 의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념과 기본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혁명과 6월 항쟁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던 5·18만 제외된 것을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할 수 없다.

5·18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월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교육계, 청년들까지 나서 '뒤로 가는 민주화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도 공론화되는 마당에 5·18민주화운동을 학교 교육에서 통째로 빼 버리는 처사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잘못된 교육과정 개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 미달에 자퇴 증가... '소멸 위기' 지방대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올해 대입 수시모집 미달률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이어 정시모집에서도 경쟁률 1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뿔뿔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중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전남 지역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미달률과 비율은 32.9%(263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도 18.1%(2248명)를 기록해 7대 대도시 중 최고였다.

잇그제 마감된 정시모집의 경우 전남대는 4.17대 1, 조선대는 3.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달 사태를 겪은 두 대학은 정원 감축으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합격자 발표 이후 학생 이탈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 사립대학들은 보건·의료 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

고는 줄줄이 미달돼 총경쟁률 1대 1을 넘긴 곳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중도 탈락 학생들이 느는 것도 큰 문제다. 전남대의 자퇴 학생은 지난 2016년 505명에서 2021년 759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 전체 대학으로 보면 2021년 신입생의 10%에 육박하는 2161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 육성의 산실인 지방대가 학생 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지역 소멸의 전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지방대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내기 어렵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프라를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기업과 연계한 취업 환경 개선으로 지방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태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누가 더 소유하고 누릴 것인지 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고 억압과 착취, 폭력과 전쟁 등을 수반했다. 고대시대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과 극소수의 귀족이 차지했고, 중세시대에는 왕·성직자·봉건 영주·귀족 등으로 지배 계층 수는 더 늘어났다.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그들의 화려함과 사치는 계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뒤엎은 것이 근대에 일어난 혁명이다. 부르주아들이 나선 프랑크 혁명, 생 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 시킨 영국의 산업 혁명,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으킨 러시아 11월 볼셰비키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왕·성직자·귀족 등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부르주아 즉 자본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거

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자본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지고 있다. 부의 독점을 원하는 자본과 그들의 금전적인 후원을 받으려는 권력의 결합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부·직업의 대물림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계층 간 빈부 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까지 더해졌다. 부유층·권력층이 수도권에만 모여 살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투자 대상을 모색하며,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일의 순서

다. 이로 인해 여자와 저소득층은 더 미약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 속에 방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노동·교육·연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 밑 요점은 충분히 공감된다. 다만 우선순위에 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약자·저소득층·지방을 끌어올려 강자·부유층·수도권과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첫 대상은 재벌, 세계 시장 개방 등이 더해지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재벌, 슈퍼 갑부들이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

고, 지방은 소멸 위기 속에 방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노동·교육·연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 밑 요점은 충분히 공감된다. 다만 우선순위에 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약자·저소득층·지방을 끌어올려 강자·부유층·수도권과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첫 대상은 재벌, 세계 시장 개방 등이 더해지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재벌, 슈퍼 갑부들이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

의료칼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가치



남정란
조선대치과병원 진료지원팀장

여러 치과병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기준은 총 3개 영역,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래만 있는 치과병원은 218개 조사 항목을 조사받고 입원 병동이 있는 치과병원은 268개 조사항목을 조사 받게 된다.

첫 번째 영역인 기본 가치 체계는 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수술 및 시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순위생 수행을 필수로 조사한다. 두 번째 영역은 환자 진료 체계로 2장 진료 전달 체계, 3장 환자 평가·감사 체계, 4장 기공 관리 체계,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 관리, 6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로 50개의 조사 기준에 맞춰 조사한다. 세 번째 영역은 조직 관리 체계로 7장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 8장 감염 관리, 9장 경영 및 조직 운영, 10장 인적 자원 관리, 11장 시설 및 환경 관리, 12장 의료 정보·의무 기록 관리로 23개 조사 기준 중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환자 안전 사건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직원 안전 관리 활동, 화재 안전 관리 활동을 필수로 조사한다.

실제 인증 조사 시 병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상·중·하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병원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이나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확인하고 실제 추적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및 직원 안전 관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병원 전체를 돌아보면서 조

사받게 된다. 이 때문에 병원 대청소는 물론 병원 내 묵힌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정리 정돈을 하게 된다. 진료로 인해 업무가 바빠 병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들여다볼 여유없이 근무를 해야 할지라도 인증제를 준비하는 동안은 반드시 규정을 익히고, 교육을 받아 관심을 갖도록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인증제를 준비하는 동안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한마음이 되기도 한다. 근무시간 동안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함께하고, 인증에 맞는 병원 규정이나 지침을 열심히 공부하며, 실제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을 통해, 병원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자신 또한 성숙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올해 인증제를 시행한 치과병원은 3주기 인증 조사를 받았거나 준비 중이다. 4년 주기가 너무 빠르게 다가온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도 까다로우며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수고를 통해 치과 의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치과병원 인증제 실시로 인증을 획득한 병원들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소수의 치과병원이 인증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증이 어려운 만큼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고

폭설에 제설 함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회회 광주시회장

서 80포 정도이다. 각 단지별로 알아서 비축해야 한다. 이상스러운 기후 변화로 들쭉날쭉한 날씨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무난히 겨울을 보내고 나면 제설용 염화칼슘은 창고에서 재고가 되어 굳어 버린다. 정작 이변과 같은 폭설이 굳어 버린 재료를 사용하려면 깨고 부서서 사용해야 할 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굳은 염화칼슘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다. 겨울 제설용 염화칼슘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이변 폭설이 내린 지 하루 만에 거의 소진되어 버렸다. 이어지는 폭설에 뒷감당도 알아서 해야 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웠다.

공무원들은 할당된 지역에서 주어진 시간에 길거리를 쓸고 출근하여 이를 보고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 헌신한다. 그리고 점수를 탄다. 여기저기 신문 기사는 광주시와 5개 구청 그리고 공무원 관련 부서 활약 얘기로 가득 채운다. 신문 기사로만 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한 것 같다.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탁상공론과 수치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생산되어 보도 자료로 이어진다.

재난 해결 현장에 공무원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이다. 이번 폭설에 광주광역시 자생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 빛을 더했다. 자율 방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 소속 회원들이 동네 이곳저곳 제설 작업에 나섰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공무원들만으로 재난 극복은 불가능하다. 하루종일 쓸고 쓸어도 쏟아

지는 눈발은 멈추지 않았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만들어 내어도 곧 쌓이는 눈으로 다시 매워져 버렸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던히 고생해 가며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내고,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려가며 설새 없이 하루 종일 누볐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도 있다. 눈발에 한밤중에도 제대로 쉬 수도 없었다. 잠시라도 쉬러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퇴근해서도 단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 옥상 경사면 팔레트에 쌓인 눈덩이 어리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다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주민이 단지 안에서 미끄러져 다치더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람들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다.

폭설과 제설 이후 열흘이 지나어도 아무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노고를 챙겨줄 여유가 없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집단 거주인 공동주택에서 단 한 차례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활동했는지를 안다면 눈물겹다. 구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감염병 예방 최일선에서 움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 이번 폭설과 제설에서 보여준 세상의 눈도 별반 차이가 없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또한 항상 재난 예방의 최일선에서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율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정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